

중 학폭 보도 인터넷신문 명예훼손 '무죄'

“검찰, 무리하게 기소... 정상적 언론활동 방해” 무죄 확정으로 비용보상 청구... 법적조치 예정

지난 2015년 광주체육중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당시 재학생이던 P모 양의 아버지 P 씨가 한국타임즈 김호성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해 8월 31일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중3 여학생의 부친인 P모 씨는 "(울산 전지훈련 중) 자신의 딸과 L모 다 이빙 감독이 머리채를 붙잡고 뽀뽀를 했다"는 한국타임즈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며, 한국타임즈 김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당시 사건 담당 광주지방법 검찰청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떨어지자, 한국타임즈 김 대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고소 후 수사 과정부터,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되기까지 2년여의 기간이 걸린 꼴이다.

앞서,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강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임즈 김호성 대표에 대해, 지난 2017년 12월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호성 대표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광주체육중, 학교폭력 편파적인 선도 조치에 당사자들 극심한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총 9회에 걸쳐 공적인 사실인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대해 '학교측의 부실조사' 등을 지적하며 기획 보도한 바 있다.

한국타임즈는 당시 광주체육중학교가

학생들 간의 폭력사건을 학교 측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이며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특히 당시 1차 조사를 담당했던 L모 감독은 사건을 최초로 인지 후, 질책을 하며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녀학생들이 모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적인 발언과 행위를 시키면서까지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P 씨가 한국타임즈 김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인 '머리채를 붙잡고 뽀뽀를 했다'는 것에 대해, 채택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증인으로 나온 L모 감독, S모 코치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형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쟁점 기사내용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으나, 2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23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고, 이후 8월 31일자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결과에 대해 한국타임즈 김호성 대표는 "수사기관에서는 한국타임즈 기사에서 지적했던 '학교측의 부실조사'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을 텐데, 그런 수사는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감사와 비판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기소한 이번 사건은, 애초 검찰 측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생각 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변호사와 상의해서 고소인이나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증과 무고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비용보상) 청구를 법원에 신청해, 지난 해 10월 26일 법원으로부터 비용지급 결정을 받아냈다. /제갈대종 기자

광주교육청-사립유치원 갈등 봉합국면 교육청 "신학기 학사일정 고려", 유치원 측 농성 천막 철거

광주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들 사이에 집중감사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봉합 국면을 맞았다. 시교육청은 감사가 이미 진행-계획 중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유치원에 대해서는 신학기 학사일정을 고려해 3월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다만 시교육청은 감사 계획이 수립 또는 통보된 36개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이달까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한국 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 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측과 지난 4일 면담을 하고 감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한사협 관계자들은 4월 이후로 감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 마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유치원 원장들은 시교육청과 한사협 간의 면담이 있기 전 천막을 철거했다. 한유총 측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60% "반대"

호남·40대서 반대높아... 한국당 지지층 찬성 우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60%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전 전 대통령의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데 대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특별사면이 됐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6.8%였고,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11.7%로 나타났다. 이념성향 별로는 진보층(반대 78.7% vs 찬성 12.8%)에서 반대 여

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64.2% vs 28.0%)에서도 반대가 우세했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반대 44.2%, 찬성 44.5%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린 가운데 찬성 의견이 근소하게 높았다. 지지정당 별로는 정의당(반대 89.6% vs 찬성 6.8%), 더불어민주당(84.4% vs 8.8%), 바른미래당(63.0% vs 찬성 26.0%) 지지층에서 고투 반대 여론이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경우 찬성 의견(56.9%)이 반대 의견(27.4%)의 2배를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호남(반대 80.3% vs 찬성 9.8%)에서 반대 여론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49.7% vs 36.7%)에서 반대 여론이 가장 낮았다.

목포 신중양시장 인접 식당가 화재

점포 13개 불에 타

목포의 전통시장 인근 식당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가 13개가 불에 탔다.

7일 목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9분께 목포시 산정동 신중양시장과 인접한 식당가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식당가는 점포 144개가 모여있는 신중양시장과 2m 폭 크기의 통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었지만 다행히 불은

시장으로 옮겨붙지 않았다.

이 불은 식당가에 위치한 상가 13개를 태우고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상인과 고객이 없는 이른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화재현장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박성태 기자

CJ대한통운, 파업 광주 택배기사 고소

노조원들 피고소인 신분 경찰 출두 규탄 기자회견

CJ대한통운과 집배대리점 측이 파업을 종료한 74명의 택배노조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조합은 7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위탁대리점들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70여명 중 74명에 이르는 조합원과 86건에 달하는 고소를 해 각 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또 파업 기간 발생한 배송-반품 사고와 관련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조합원들에게 사고 금액을 부과하겠다는 문자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 현장에 없었던 사람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례도 있는 등 CJ대한통운과 대리점 측이 무분별한 고소를 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의 고소·고발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시도는 노조단합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CJ대한통운 측에 고소·고발



7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광주지역 택배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단과 노조와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에는 "합법적인 파업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회피가 문제를 키웠다"며

"노조설립을 허가한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업무방해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출두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노조원들은 경찰에도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출발전
행선지 파악

운행전~~

경제적인 주행코스 선택하기

GREEN ENERGY